

「금강 살리기」사업의 갈등실태 분석 및 정책적 함의

Analysis of the Conflict Condi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n the Revitalizing Project of Geum River

최병학(Choi, Byoung Hahk)* · 길병옥(Kil, Byung Ok)**

ABSTRACT

The promotion of the revitalizing project of Geum River is expected to generate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f 3.3 trillion won and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of 30,000 people in the Chungchong areas. It also leads to a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for the governing, utilizing, and friend-making of water(Geum River) in 7 cities and counties nearby the River.

However, from the beginning, the project has made a variety of conflicting cases including criticisms of duplicated and excessive projects as well as compensation problems related to the land transferring and collecting composites. Thus, it needs to have an objective and rational project promotion based on the just and clear compensation procedures.

This inquiry suggests an urgent need to propose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and cooperative plans. It focuses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related to the problems on the sites and their implications via questionnaires and expert interviews. Through the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conflict types and their alternatives, it stresses the establishment of conflict prevention management system that can generate resolution and/or minimization plans from the initiative phase of the project.

Key words: 금강살리기 사업(Revitalizing Project of Geum River), 갈등유형 및 관리(Conflict Types and Management), 갈등예방관리체계 구축(Establishment of Conflict Prevention Management System), 생존가능한 지역발전(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충청권(Chungchong Areas)

1. 서론

정부간 협력관계 및 갈등관련 이론연구 및 조사분석은 상당수 나와 있으나, 특정의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해소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실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앞으로의 바람직한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충남지역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중 금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미 시작단계에서부터 7개 시·군간 중복사업 및 과다사업, 편입농지 및 골재채취 등과 관련한 보상문제 등 다양한 갈등상황이 예상되거나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을 포함하여 4대강살리기 사업의 찬반논의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갈등예방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갈등실태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금강살리기 사업추진을 통해 충청권 전체 차원에서 약 3조 3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에 7개 시·군(공주·논산시, 금산·연기·부여·서천·청양군)들은 치수·이수·친수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협력(지역내 협력 및 지역간 협력)은 물론,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갈등해소방안 모색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은 금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작단계에서부터 시·군간의 중복사업 및 과다사업, 편입농지 및 골재채취 등과 관련한 보상문제 등 다양한 갈등상황이 우려되고 있고, 합리적 사업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불법·탈법과 연계된 공직비리 및 보상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등의 개연성도 현실적으로 부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강권역 7개 시·군간 발생될 갈등유형과 협력을 저해하는 갈등요인과 협력요인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갈등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시 예상되는 갈등소지 및 갈등유형의 분석과 함께 정책적 함의를 발견해 봄으로써, 앞으로 갈등해소 및 관리시스템 구축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와 함께 금강살리기 사업의 개요 및 예상 갈등유형의 추출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통해 문제점 파악과 함께 향후 갈등해소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는데 주력하였다.

II. 갈등유형별 관리전략과 금강살리기 사업

1. 갈등의 유형화와 관리전략

1) 갈등의 유형화

오늘날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은 사업주체간의 갈등과 갈등성격상의 갈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사업주체간의 갈등은 주민과 정부 및 지자체 간의 갈등, 정부와 광역 및 기초단체간의 갈등, 각 지자체 간의 갈등, 기타 주민·NGO·사업집단 간의 갈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격에 따른 갈등은 개인적 이해갈등, 공익적 가치갈등, 유사사업 연계 및 경합 갈등, 선호사업 유치갈등 등의 양상을 띤다.

일반적으로 갈등의 유형은 갈등 분야에 따라 또는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박형서 외, 2004: 25-27). 공공정책 혹은 지역개발에 있어서 흔히 갈등주체, 갈등내용, 갈등성격, 진행단계, 갈등이슈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갈등의 속성을 이해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시한다(나태준, 2004: 18-23). 갈등의 주체(당사자)를 기준으로 한 갈등의 유형은 개인갈등, 집단갈등 및 조직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갈등은 조직 내의 두 사람 이상의 대인간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 의견차이, 역할 경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집단갈등은 조직 내 수직적 또는 수평적 계층 간에 발생한다. 중앙정부 내의 부처간 갈등, 정부간의 갈등(중앙과 지자체, 지자체간), 그리고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 이익집단 간의 갈등 등 다양한 행동주체들 간의 갈등이 있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12-13). 갈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갈등의 유형은 지방 행·재정 분야의 갈등, 지역개발 분야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 행·재정분야 갈등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인사, 조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방행정 관련 갈등, 과세 및 세제와 관련한 지방재정 관련 갈등으로 구분된다. 지역개발 분야 갈등은 하천 관련, 광역 공급 시설 등 광역시설 관련, 관광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관련 갈등 등으로 구분된다.

갈등의 성격을 기준으로 할 때 흔히 갈등의 유형은 이익갈등과 권한갈등으로 구분한다(박형서 외, 2004: 26). 이익갈등은 이해관계나 욕구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며, 대부분 토지이용, 시설입지, 관리에 있어 관련지역 주민간 혹은 지역간 비용과 편익배분에 대한 이익의 대립으로 발생하며 기피갈등(NIMBY), 유치갈등(PIMFY), 타지역 피해유발갈등, 공익가치 추구 갈등 등이 있다. 권한갈등은 이해당사자 간의 권한과 책임귀속의 여부 내지는 적합성에 관련된 분쟁으로 정부간 갈등유형에서 주로 발생하며, 정부간 갈등에서 각종 인·허가, 재산의 관리·처분·이용에 따른 분쟁 등이 여기에 속하며, 시설관리와 비용부담에 관한 갈등도 포함된다.

또한 갈등표출 여부에 따라 잠재적 갈등과 현재적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잠재적 갈등은 갈등을 일으킬 조건들이 존재하고 갈등 당사자들이 이를 지각하고 있지만 갈등에 따르는 외면적 행위들이 감추어진 상태의 갈등을 말한다. 그리고 현재적 갈등은 갈등당사자들의 불만과 경쟁심 등이 외부로 표출되어 행동하는 상태의 갈등을 말한다. 이밖에도 갈등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공간적 범위와 계층적 범위로도 구분할 수 있다(박형서 외, 2004: 26-27).

2) 갈등유형별 관리전략

갈등이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지니는 동시에 제거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Deutsch, 1973), 갈등의 적절한 관리(교환, 협상)를 통하여 갈등당사자간 행동을 상호 협력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Carpenter & Kennedy, 1987).

그리고 특정 문제(사건)를 중심으로 갈등요인의 작용 여부 내지는 정도에 따라 갈등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양자는 공히 협력과정인 교환과 협상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협력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수준이나 정도에 따라 협력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 반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관리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나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과의 관계설정, 상대와의 관계와 나의 이익 사이의 우선순위설정 등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Pruitt & Rubin, 1986). 첫째, 회피형은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행태로서 사람의 기본성격이 그럴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회피형이 선택된다. 둘째, 수용형이란 자신의 이익은 중요하지 않고 상대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때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는 타고난 성격적인 면도 있으나 주어진 환경이나 자신이 처해있는 입지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셋째, 통제형 갈등관리유형은 상대와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넷째, 타협형은 상대와의 관계에서나 서로 추구하는 목표에서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상호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하는 유형이다. 다섯째, 협동형의 갈등관리전략은 상대와의 관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서로 원하는 목적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일종의 공동승리(win-win) 갈등관리전략이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갈등관리가 협동형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갈등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개발되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되고 있기도 한다(이선우, 2001).

2.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예상갈등

1) 「금강살리기」 사업의 개요

금강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간적 범위는 2009년 6월 15일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금강이 흐르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등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목표는 해마다 반복적인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과 양질의 용수확보를 위해 생태계 복원, 수변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금강유역에 총 2조 4,727억원을 투입하여 본류사업은 2011년까지, 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금강 살리기 사업내용

(단위:억원)

사업내용		수량	사업비	비고
합 계(억원)		-	24,727	
국토부	소 계		16,598	
	하도정비(준설)	0.5억 m³	3,720	
	보	3개소	2,023	
	생태하천 조성	41개소 124km	5,772	
	제방보강	26개소 71km	2,371	
	자전거 도로	248km	303	
	기 타	-	2,409	
농림부	농업용 저수지	30개소	6,767	
환경부	수질대책	99개소	1,362	

※ 연계사업(120km/3,181억원), 수공시행 사업(44km/1,013억원) 별도.

2)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예상 갈등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시·군 추진사업 및 연계사업은 이미 금강권역의 각 시·군에서 모두 100여개에 달하는 연계사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역별 연계사업은 공주시 23개, 논산시 11개, 금산군 11개, 부여군 10개, 연기군 9개, 서천군 14개, 청양군 14개 사업이며, 분야별 연계사업은 교통망 확충 7개, 환경보전 53개, 문화관광 27개, 녹색뉴딜 3개 사업 등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각 시·군별로 외곽적인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갈등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하류 지자체간 물 이용에 따른 수량 및 수질문제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용수배분 갈등).

둘째, 지역특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투자와 유치경쟁으로 인해 보상관련 갈등이 다수 발생할 것이다(농지보상 및 골재채취 등).

셋째, 인접지역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단독적인 사업강행으로 인한 환경보전과 개발 사업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넷째, 단기간내 실적만을 앞세운 실현불가능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이해당사자 및 NGO의 반대로 인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다섯째, 수자원 배분 및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부담문제 등으로 인한 생태보호와 농수이용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금강하구둑).

더욱이 당초부터 정부사업 추진에 대한 불신, 환경훼손 문제, 예산확보 문제, 수질오염 문제, 점유지 보상 문제, 지역(시·군)간의 갈등 문제, NGO단체들의 반대 문제, 연계사업의 실효성 문제, 특히 보상금 부당수령 문제¹⁾ 등이 계속 우려되고 있다.

III.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본 실태조사는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모두 5가지 갈등유형별로 예상되는 갈등소지에 대하여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대상 인터뷰 조사로 이루어졌다.

먼저 설문조사지는 예비조사 등을 거쳐 총 3회 수정·보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별 갈등해소와 협력방안의 모색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7개 시·군 중심으로 설문조사 약 750여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충청남도, 금강권역 7개 시·군(공주, 논산, 금산, 연기, 청양, 부여, 서천)을 중심으로 2009년 7월 15일에서 2009년 7월 31일까지(약 2주간)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SPSS 12 통계패키지 이용하여 분석(694부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재학중 포함), 직업, 직급(공무원 대상), 담당분야(공무원 대상), 소득수준, 거주지(지역)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는 2009년 4월 10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대전일보사와 공동개최한 “금강살리기 공동협력포럼”을 통해 이루어졌다.²⁾

1) 최근 낙동강살리기 김해사업구역내 보상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마을이장, 담당공무원이 공모하여 부당한 보상금 수령사건이 발생하는 등 ‘눈먼 돈’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한겨레신문, 2010. 3. 22).

2) 이는 충남지사 및 도의회 의장, 금강권역 7개 시·군의 시장·군수 및 의회의장, 지역주민 대표(7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일보사 사장 및 담당기자단(2명),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의장 및 의원(3명), 충남발전연구원장 및 연구위원(3명) 등이었다.

2.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1) 「금강살리기」사업의 주요내용(인식관련)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34.7%로서 모르겠다는 의견의 23.9% 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보통이라는 의견이 41.3%로 조사되어 아직까지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은 편이며,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강살리기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그 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외하고 찬성의 긍정적 의견이 전체의 46.0%로서 반대의 부정적 의견의 29.0% 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으나 사업자체의 중단 및 계획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높게 조사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금강살리기 사업 계획의 수립과 추진 시점에서부터 갈등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이 충남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전체의 43.2%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의 25.3%보다 높게 나타나, 금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이 지역발전에 공헌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알 수 있었다.

금강살리기 사업내용(보 설치, 저수지 증고 등)의 만족도(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43.3%가 만족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전체의 23.3%가 불만족하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뭄과 홍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의 농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며, 금강살리기 사업에 거는 기대를 알 수 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원 관리, 생태하천 조성(197km), 농경지 정리(30.1km²) 등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필요성)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54.3%가 만족(필요)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전체의 16.5%가 불만족(불필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에 비해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강 중심의 레저기반 확충을 위한 자전거길 설치(204km), 옛 뱃길복원 등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필요성)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51.2%가 만족(필요)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어, 전체의 20.0%의 불만족(불필요)를 나타낸 부정적인 의견보다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문화유산 확충 등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을 반영한 결과라 사료되며, 추후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이러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차이검증을 통한 「금강살리기」사업관련 갈등요인

① 사업관련 인식의 직업에 따른 차이분석

<표 2> 직업군에 따른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항목	직업군에 따른 분산분석			F값	유의확률
	농업(임업)	주민	공무원		
인식여부	2.8586 (A)	2.8954 (A)	2.7604 (A)	1.447	0.236
찬반여부	3.1717 (C)	2.9326 (B)	2.6009 (A)	10.564	0.000**
지역발전	3.2708 (C)	2.8296 (B)	2.5853 (A)	15.365	0.000**
용수공급	2.9394 (B)	2.6929 (A)	2.7083 (A)	2.124	0.120
수질개선	2.8776 (B)	2.4959 (A)	2.2930 (A)	10.049	0.000**
레저기반	3.1020 (B)	2.4946 (A)	2.4047 (A)	14.360	0.000**

*: $p < 0.05$, **: $p < 0.01$

농민, 주민, 공무원 집단 모두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하여 공무원들은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에 비해 농민은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금강살리기 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에 관한 조사결과 역시 공무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농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인 용수공급능력 확보, 수질개선, 레저기반 확충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주민의 경우에는 만족한다는 긍정적 의견을 보이는 반면, 농민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② 사업관련 인식의 거주지(지역)에 따른 차이분석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식여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부여군, 연기군, 논산시 등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지역은 금강살리기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역임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강살리기 사업계획 및 추진에 대한 찬반여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청양군이 찬성여부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부여군, 기타지역, 논산시 등은 찬성여부가 낮은 편이었고, 그 중 논산시가 사업에 대한 찬반여부가 반대에 가까웠다.

<표 3> 거주지(지역)에 따른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항목	거주지(지역)에 따른 분산분석								F값	유의 확률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기타		
1	3.0811 (BC)	2.7353 (A)	2.9438 (ABC)	2.6735 (A)	2.6711 (A)	2.8100 (AB)	2.9167 (ABC)	3.1667 (C)	2.745	0.008**
2	2.6486 (AB)	3.2745 (D)	2.8864 (ABC)	2.7857 (ABC)	3.0921 (CD)	2.6931 (AB)	2.6168 (A)	3.0238 (BCD)	4.154	0.000**
3	2.6111 (AB)	3.1667 (C)	2.8977 (BC)	2.6875 (AB)	3.1892 (C)	2.4516 (A)	2.6762 (AB)	2.9268 (BC)	6.052	0.000**
4	2.7027 (ABCD)	2.9802 (DE)	2.8391 (BCDE)	2.6082 (ABC)	3.1053 (E)	2.4900 (AB)	2.4579 (A)	2.9048 (CDE)	4.368	0.000**
5	2.3919 (AB)	2.8911 (C)	2.6591 (BC)	2.2577 (A)	2.6533 (BC)	2.2424 (A)	2.2430 (A)	2.7619 (C)	5.379	0.000**
6	2.1757 (A)	2.8812 (D)	2.7701 (CD)	2.4433 (ABC)	2.8533 (D)	2.3434 (AB)	2.4019 (ABC)	2.5952 (BCD)	4.653	0.000**

※ 항목 : 1. 인식여부, 2. 찬반여부, 3. 지역발전, 4. 용수공급, 5. 수질개선, 6. 레저기반조성

*: $p < 0.05$, **: $p < 0.01$

금강살리기 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조사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서천군 응답자들이 금강살리기 사업이 지역발전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산시와 부여군의 경우에는 반대로 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 중에서 용수공급능력 10억톤 증대를 위한 보(부여보, 금강보, 금남보) 설치와 하도준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31개) 등에 관한 만족(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양군의 경우가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반대로 부여군의 경우는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 중에서 2012년 금강 본류 2급수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원 관리, 생태하천 조성, 농경지 정리 등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만족(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천군, 청양군, 연기군 등은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기타지역과 논산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 중에서 강 중심의 레저기반 확충을 위한 자전거길 설치, 공주-부여를 연결하는 옛 뱃길복원(백제문화관광루트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한 만족(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주시의 경우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부여군과 논산시의 경우 만족도가 낮았다.

③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직업에 따른 차이분석

용수이용에 따른 갈등과 골재채취 관련 갈등에는 농민과 주민 집단보다 공무원 집단

에서 갈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조사되었으며, 농지보상, 소유권(재산), 골재채취, 수질정화, 권한·권리 등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는 농민이 가장 갈등의 영향정도가 클 것으로 응답하여 다른 일반주민과 공무원집단과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직업군에 따른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에 대한 영향정도 분산분석

항목	직업군에 따른 분산분석			F값	유의확률
	농업(임업)	주민	공무원		
용수이용	2.3871(A)	2.3224(A)	2.7407(B)	15.328	0.000**
농지보상	1.8000(A)	2.0191(B)	1.8972(AB)	3.101	0.046*
상하류간	2.2553(A)	2.2636(A)	2.4047(A)	2.089	0.125
땀피(선호)	2.5957(B)	2.3196(A)	2.4366(AB)	3.641	0.027*
소유권(재산)	1.8404(A)	2.0410(B)	2.2150(B)	5.672	0.004**
골재채취	2.0638(A)	2.2198(A)	2.4272(B)	5.486	0.004**
수질정화	1.9681(A)	2.0847(B)	2.4131(B)	11.776	0.000**
권한권리	2.0213(A)	2.1339(AB)	2.2991(B)	3.780	0.023*

*: $p < 0.05$, **: $p < 0.01$

대부분 주어진 문항에서 농민집단에서 갈등원인의 영향정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유일하게 땀피(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그 영향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은 일반주민집단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공무원 집단, 농민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④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거주지(지역)에 따른 차이분석

용수이용 문제와 관련하여 서천군이 그 갈등의 영향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여군은 용수이용 문제와 관련한 갈등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보상문제에 따른 갈등의 영향정도는 부여군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금산군의 경우 반대로 영향력에 대해 낮게 조사되었다.

상하류간 갈등에 대한 영향정도는 부여군과 서천군의 경우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공주시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시 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땀피(선호)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의 영향정도는 연기군, 서천군, 청양군의 경우 그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반대로 논산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조사되었다.

소유권(재산) 유지에 따른 갈등의 영향정도는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의 경우 그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반대로 공주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에 관한 반응이 저조하였다.

<표 5> 거주지에 따른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에 대한 영향정도 분산분석

항목	거주지(지역)에 따른 분산분석								F값	유의 확률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기타		
1	2.6622 (CD)	2.6040 (CD)	2.3929 (ABC)	2.3918 (ABC)	2.8767 (D)	2.1900 (A)	2.2736 (AB)	2.5366 (BC)	5.364	0.000**
2	2.2027 (CD)	1.9500 (BC)	2.2706 (D)	1.8454 (AB)	1.6486 (A)	1.8061 (AB)	1.8505 (AB)	2.2195 (CD)	5.629	0.000**
3	2.5479 (B)	2.3762 (AB)	2.2791 (AB)	2.2680 (AB)	2.2329 (A)	2.1800 (A)	2.2991 (AB)	2.3171 (AB)	1.390	0.206
4	2.4795 (AB)	2.6600 (B)	2.3452 (AB)	2.2083 (A)	2.5205 (AB)	2.3030 (A)	2.2830 (A)	2.4250 (AB)	2.436	0.018*
5	2.3649 (B)	2.0100 (A)	2.1786 (AB)	2.0515 (AB)	1.9726 (A)	1.9697 (A)	1.9813 (A)	2.1220 (AB)	1.728	0.099*
6	2.1489 (BC)	2.6535 (C)	2.3293 (AB)	2.1340 (AB)	2.2778 (AB)	2.0816 (AB)	2.0187 (A)	2.2683 (AB)	4.552	0.000**
7	2.2973 (BC)	2.3500 (C)	2.3176 (C)	2.0947 (ABC)	2.2877 (BC)	1.8788 (A)	2.0000 (AB)	2.3415 (C)	3.607	0.001**
8	2.4730 (C)	2.2574 (BC)	2.1765 (ABC)	2.1158 (AB)	2.1644 (ABC)	1.8990 (A)	2.1869 (ABC)	2.1707 (ABC)	2.699	0.009**

※ 항목: 1. 용수이용, 2. 농지보상, 3. 상하류간, 4. 펌피(선호), 5. 소유권(재산), 6. 골재채취, 7. 수질정화, 8. 권한(권리)

*: $p < 0.05$, **: $p < 0.01$

골재채취관련 갈등의 영향정도는 청양군의 경우 그 영향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논산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에 가장 낮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질정화 비용분담에 따른 갈등의 영향정도는 서천군의 경우 그 갈등의 영향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논산시, 금산군, 기타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권한 및 권리에 관한 갈등의 영향정도는 서천군의 경우 발생할 갈등의 영향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공주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에 가장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3. 인터뷰조사의 주요 결과

1) 현장의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환경관련단체에 대하여 사업취지, 사업내용, 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을 충분히 개

최하여 여론수렴 및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사업추진은 시민단체나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며, 그 결과 많은 장애물이 발생할 것이므로 상생과 협력 차원에서 당국은 '쏜 소리'를 들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갈등조정을 위한 조례제정 및 관리·지원체제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2) 환경보전이 우선된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

금강살리기 사업은 환경보전이 우선하는 가운데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생태계 보존을 우선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일 일시적이며 기계적인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향후 회복불능의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금강의 물길에 대한 자연조정력과 인위적 조정에 대한 관심과 책임,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자연환경 공유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3) 무단점용 하천부지 적정 보상대책 필요

하천부지의 점용문제 등을 둘러싼 보상대책에 관해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동안 하천부지에서 경작하여 생계유지를 해 온 영농인에 대한 생계대책은 불가피하한 실정이며,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보상갈등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

다만 현재 무단점용하여 경작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실농비 보상'이 가능하도록 관계당국에서 계속 노력해야 하며, 특히 불법·탈법으로 보상금을 타내는 경우는 엄중히 조사, 조치가 필요하다.

4) 금강권역 7개 시·군의 공동참여 협의체 구성 추진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강권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

특히 금강살리기 사업이 계획한 대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주변 주민들과의 대화나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며, 시·군간 협력 및 갈등사안에 관한 협의기구의 지속적 운영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 주관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사업 정보의 공유화 및 합의점 도출 후 사업시행이 매우 중요하다.

5) 지속적 홍보 노력 및 협력·지지기반 강화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며, 아울러 협력 및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의 인식변화의 필요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홍보를 통해 불신의 해소,³⁾ 지역간,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정보상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 그리고 지방정부 외에도 언론과 전문가집단, 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필요하다.

6) 기타 의견

기타 의견으로는 준설대상 저수지(농업용)의 퇴적물 제거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대상으로 하수관리(오염물질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상류에서 하류까지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근원적인 차단, 그리고 금강 본류도 중요하지만 지류 하천정비 및 셋강(실개천) 살리기 운동과 병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및 사전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에는 주민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전담공무원 인력의 배치나 확보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4. 요약 및 시사점

1)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금강살리기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의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공무원 집단에 비해 농민과 일반주민들의 찬성여부가 낮게 조사되었으며, 금강살리기 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역시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나타났으나, 공무원 집단에 비해 농민과 일반주민들의 반응을 다소 낮게 나타냈고, 이 역시 직업 및 거주지(지역)에 따라 차이가 조사되었다.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에 관한 조사 항목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주체간의 갈등이 심할 지를 예상해 보았는데, 중앙(자치단체)-NGO, 주민-중앙정부, 주민-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많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역시 직업과 거주지(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갈등의 소지가 많은 사업으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갈등의 표출형태는 현재적 갈등이, 갈등의 발생범위는 지역간(시·군)간 갈등이, 발생한 갈등의 영향은 농지

3) 이는 “4대강 살리기”가 아닌 “대운하사업”을 둘러서 추진한다는 정부에 대한 당초 불신의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상이 가장 높은 빈도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여군 등 특정지역에서, 농민 등 특정 직업군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다른 직업군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해결하는 방안은 주어진 문항에 대해 대체로 그 중요성에 동의하는 반응이 나타났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중앙정부, 자치단체장, 시민단체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조정하기 위한 제3의 중재기구의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한편,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실시된 인터뷰 조사의 결과를 보면, 개별사업들의 중복을 막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자치단체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권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정보공개 및 홍보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환경보존 위주의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과 함께 가장 큰 장애물로 보이는 하천부지 경작주민들에 대한 현실서 있는 보상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 정비 및 관리·지원체계 개선이 중요하다.

2) 정책적 함의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그 정책적 함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갈등의 해소 및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특히 갈등실태 및 갈등해소요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이에 적합한 관리·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갈등해소 및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금강살리기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7개 시·군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럼이나 현장간담회 개최로 사전 갈등예방 및 정책반영도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노력 강화가 필요하며,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당공무원의 투명성과 체계적인 관리역량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확인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하천부지 점용문제는 각 시·군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끌어안을 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앞으로 보상과 관련된 공직비리나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을 엄격히 차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금강살리기는 장기적 관점에서 육지부부터 오염원 차단과 지천관리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군간, 민·관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로 유사한 사업들은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해 가는 상생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V.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르는 예상되는 갈등의 소지를 진단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갈등해소 및 협력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초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함께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았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거대한 국책사업이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기본목표인 수해방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당초취지에 맞추어 환경보전이 우선시되면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요인에 관한 조사결과, 중앙(자치단체)-NGO, 주민-중앙정부, 주민-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많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역시 직업과 거주지(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갈등의 소지가 많은 사업으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갈등의 표출형태는 현재적 갈등이, 갈등의 발생범위는 지역간(시·군)간 갈등이, 발생한 갈등의 영향은 농지보상이 가장 높은 빈도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여군 등 특정 지역에서, 농민 등 특정 직업군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다른 직업군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중앙정부, 자치단체장, 시민단체의 순이었다.

셋째, 갈등을 예방 및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접 7개 시·군간의 협의체를 구성, 예상되는 갈등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갈등발생시 초기단계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갈등예방관리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아울러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및 남부권 상생포럼 등과 같이 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제3의 중간조직의 활용은 물론, 7개 시·군간 협의체, 지역주민과 전문가집단, 실무자가 함께 하는 다자간 협의체 구성 등 민간주도의 공익단체들을 적극 활용 및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갈등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갈등순회매니저제도 도입」 및 (가칭)「금강살리기 위한 지원조례」 등을 조속히 검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최병학, 2009: 151-159).

넷째,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합리적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강살리기 사업을 추진 초기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절차의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 받아야 할 것이다.

넷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특히 향후 불법·탈법과 연계된 공직비리 및 보상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등의 개연성도 현실적으로 부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인 하천부지를 무단경작 주민들에 대한 실제 보상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치단체간 통일되고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금강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장차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검토,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적인 댐·홍수조절지, 농업용저수지의 재개발에 대한 환경보전 위주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2. 향후과제 및 정책제언

첫째, 해외 및 선진국에서 경험했던 강 또는 유역살리기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관리했으며, 이 때 적용된 갈등관리 메카니즘과 운영 프로그램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조사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정부주도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태와 금강살리기 사업의 그것을 서로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갈등요인이 지역적 특성의 영향 또는 사업자체의 영향 여부를 가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갈등예방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해 사업시행의 영향권역을 환경적 차원 및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설정,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아직까지 대규모 공사에도 갈등영향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나, 충분한 사전 예비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의 영향권역을 대·중·소 영향권 등으로 구분한다면 환경적,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갈등영향분석에 실질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셋째, 지방정부는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한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상호작용과정으로서의 계획,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실행과정, 지역적 역량의 형성과정으로서의 갈등관리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을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를 토대로 「갈등순회 매니저제도」(Circuit Riding Manager)나 「갈등관리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은 지방정부는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용하여 일련의 평가과정을 거쳐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성철 외 (2006),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DB센터.
- 국토해양부 (2009),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사업계획」.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2009 희망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http://www.mltm.go.kr>
- 권경득·최병학 (2007),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태조사 및 유형화 연구」, 기획과제 최종연구 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 금강환경유역청 홈페이지(2009 희망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온몸으로 체험하는 금강천리), <http://gg.me.go.kr/>
- 김병옥·최병학 (2008), 「서해안지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충남지역 갈등 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연구」, 기획과제 최종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 김명수 (2009), 「금강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과제」, 「금강살리기 대토론회」, 충남발전연구원.
- 나태준·박재희 (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 대전일보 (2009, 3~4), 「금강살리기 관련 기획보도」.
-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갈등관리시스템구축방안 연구보고서」,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박종득·최호택·최병학 외 (2009, 12), 「충청남도 갈등관리 인재육성 및 활용방안 연구」, 기획과제 최종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홈페이지(행복4강), <http://www.4rivers.go.kr/>
- 신창현 (2001), 「환경분쟁의 원인과 제도개선방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안광일 (1994), 「정부갈등관리론」, 서울: 대명출판사.
- 전재경 (2005), 「갈등관리 법제의 구조와 과제」, 「국토」, 제283호, 국토연구원.
- 최병학 (2009), 「서해안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 해소를 위한 실증분석 및 문제점 도출」, 「정책포커스」, 제3호,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 _____ (2009), 「성공적인 「금강살리기」를 위한 시·군 공동협력 방안」, 「금강살리기 공동협력 포럼」, 주제발표논문, CDI 세미나 2009-11, 충남발전연구원.
- _____ (2009),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실태 및 해소방안」,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세미나」, 발표논문,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주최.
- _____ (2009),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최병학 외 (2008), 「충청남도 민·관·군 협력거버넌스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_____ (2009, 9, 4),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갈등조정사제도 도입 관련 자문회의

- 자료집」, 상생협력·감등관리 충남포럼·한국행정학회 공동주최.
- _____ (2009, 12, 17), 「지방자치단체의 감등관리 조례제정방향」, 국무총리실·한국행정연구원 공동주최 주제발표논문 각각 참조.
- _____ (2009, 12, 11), 「행정학 기존자격증 제도의 문제점 검토 및 신설자격증 제도의 도입 방안: '감등조정사'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 유용성의 재발견」, 한국행정학회 통계학술대회 주제발표논문.
- 최해진 (2004), 「감등의 구조와 전략」, 서울 : 두남.
- 한국수자원공사 (2008),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한국행정학회 행정학·행정학과위기관리특별위원회 (2009), 「제1차 회의록(7, 29), 제2차 회의록(8, 12), 제3차 회의록(9, 4), 제4차 회의록(11, 3)」.
- 한상욱 (2009), 「금강살리기 연계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금강살리기 대토론회」, 주제 발표논문, 충남발전연구원.
- 환경부 (2008), 「환경통계연감」.

- Hustedde, Ronald J., Smutko, Steve, Kapsa, Jarad J. (2001), *Public Conflict Resolution : Turning Lemons to Lemonade: A Training Workbook for Extension Educators and Community Leaders on Public Conflict Resolution*, Southern Rural Development Center, SRDC Series #221.
- Kim Yong-Woong & Cha Mi-Sook (2001), *Public Dispute Resolution in Kore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Michells, Maiese (2003), "Beyond Intractability," eds., Guy Burgess and Heidi Burgess, *Conflict Research Consortiu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Posted.
- Sandole, Dennis J. R. (2003), *Conflict: From Analysis to Intervention*, New York: Continuum.

투고일자 : 2010. 1. 27

수정일자 : 2010. 3. 18

개제확정 : 2010. 3. 24